

별 첨

2014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2015. 12.

기 획 재 정 부

순 서

I.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개요 ..	1
II. 공공부문 부채 분석	2
1. 현황	2
2. 부문별 현황 분석	4
3. 전년대비 증감 분석	8
4. 건전성 분석	11
III.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13

◇ 요약 ◇

I.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개요

- ① (작성배경)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 ② (작성범위)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분되며, 중앙 및 지방의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을 모두 포괄

II. 공공부문 부채 분석

- ① (현황) '14년 공공부문 부채는 957.3조원, GDP 대비 64.5%
 - 일반정부 부채는 620.6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5조원,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는 71.7조원

(단위: 조원, %, %p)

	2013년(A)		2014년(B)		증감(B-A)	
	규모	GDP대비	규모	GDP대비	규모	GDP대비
공공부문 부채(A+B-C)	898.7	62.9	957.3	64.5	58.6	1.6
A. 일반정부 부채(a+b-c)	565.6	39.6	620.6	41.8	54.9	2.2
a. 중앙정부	522.5	36.6	569.3	38.3	46.8	1.7
b. 지방정부	54.6	3.8	58.6	3.9	3.9	0.1
c. 내부거래	11.5	0.8	7.3	0.5	△4.1	△0.3
B. 비금융공기업 부채	406.5	28.5	408.5	27.5	2.0	△1.0
a. 중앙 공기업	362.0	25.3	366.3	24.7	4.3	△0.6
b. 지방 공기업	50.9	3.6	49.4	3.3	△1.5	△0.3
c. 내부거래	6.4	0.4	7.2	0.5	0.8	0.1
C. 내부거래	73.4	5.1	71.7	4.8	△1.7	△0.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②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58.6조원, GDP 대비 1.6%p 증가
 - (일반정부) 중앙정부(46.8조)* 및 지방정부(3.9조) 부채 증가, 중앙-지방간 내부거래 감소(△4.1조)**로 54.9조원 증가
 - *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38.4조),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8.1조) 및 민자사업(BTL) 부채(1.2조) 증가 등
 -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對중앙정부 차입금 감소(△3.9조) 등
 - (비금융공기업) 중앙 공기업 부채 증가(4.3조)*, 지방 공기업 부채 감소(△1.5조) 등으로 2.0조원 증가
 - * 한전 및 발전자회사(4.5조), 가스공사(2.2조), LH(△3.0조) 등

◇ 요약 ◇

- ③ (건전성 분석) GDP 대비 부채 규모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한 6개국 중 양호한 편*이며, 전년대비 부채 증가속도도 하락
 - * 일본(276%), 포르투갈(144%), 캐나다(119%), 영국(97%), 호주(72%), 멕시코(44%)
- (규모) 일반정부 부채(41.8%)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나, 비금융공기업 부채(27.5%)*는 주요국에 비해 큰 편
 - * 일본(31%), 포르투갈(4%), 캐나다(12%), 영국(3%), 호주(10%), 멕시코(7%)
- (증가속도)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규모(GDP 대비)가 전년 대비 감소('13년 3.3%p→'14년 1.6%p)
 - 일반정부 부채 증가규모('13년 3.0%p→'14년 2.2%p)와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규모('13년 0.2%p→'14년 △1.0%p)가 모두 감소

III.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 ① (부채 총량관리) 국가채무 관리 및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통해 공공부문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 ②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공공부문의 각 부문별 중기 재정계획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GFSM 2014 등 최신 재정통계 국제기준 도입 검토
- ③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 장기재정전망 발표 및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통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 ④ (재정정보 공개 확대) 중앙 및 지방의 재정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 제고

I.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개요

1 작성배경

-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 공공부문 부채 등 공공부문의 광범위한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투명하게 공개
 -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정건전성 관리의 토대 마련

2 작성범위

- (포괄범위)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괄
 - 정부의 지배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포괄범위를 설정ⁱ⁾한 후,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ⁱⁱ⁾
 - 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등 **총 452개 기관**을 포괄(14년 기준)
 - * 공공기관 중 금융공기업(11개)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공기업(254개)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직영공기업 특별회계)
 - ii) 이 중 시장성이 없는 **277개** 기관은 정부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일반정부**(비영리공공기관)로 분류, 시장성이 있는 **175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
- (부채 정의)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부채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으로 정의
 - 채무상품(debt instrument)을 채무증권(debt securities), 차입금(loans), 기타 미지급금(other accounts payable) 등으로 분류
 - * 원금 및 이자 지급 의무가 없는 주식, 금융파생상품 등은 제외

II. 공공부문 부채 분석

1 현 황

- ◇ '14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3조원, GDP 대비 64.5%

① 부문별 현황

- 일반정부 부채는 620.6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5조원,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는 71.7조원*

* 국민연금 보유 공기업 채권(31.0조), 주택도시기금-LH간 융자(25.9조) 등

(단위: 조원, %, %p)

	2013년(A)		2014년(B)		증감(B-A)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 공공부문 부채	898.7	62.9	957.3	64.5	58.6	1.6
▪ 일반정부	565.6	39.6	620.6	41.8	54.9	2.2
▪ 비금융공기업	406.5	28.5	408.5	27.5	2.0	△1.0
▪ 내부거래	△73.4	△5.1	△71.7	△4.8	1.7	0.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② 부채 항목별 현황

- 채무증권 697.8조원, 차입금 99.9조원, 기타 미지급금 159.7조원으로, 채무증권이 전체 부채의 72.9%를 차지

(단위: 조원, %, %p)

	2013년(A)		2014년(B)		증감(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채무증권	658.5	(73.3)	697.8	(72.9)	39.3	(△0.4)
차입금	86.6	(9.6)	99.9	(10.4)	13.2	(0.8)
기타 미지급금	153.6	(17.1)	159.7	(16.7)	6.1	(△0.4)
합 계	898.7	(100.0)	957.3	(100.0)	58.6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부채 성질별 현황

- (만기) 공공부문 부채 중 차입 당시 만기(원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 부채는 14.0%, 1년 초과인 장기 부채는 86.0%
 - 공공부문 부채 중 '14년말 현재 잔존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 부채는 25.3%, 1년 초과인 장기 부채는 74.7%
- (표시통화) 공공부문 부채 중 원화 부채는 94.2%, 외화 부채는 5.8%
- (이자율 유형) 공공부문 부채 중 고정이자율 부채는 95.0%, 변동이자율 부채는 5.0%
- (채권자 거주지) 공공부문 부채 중 국내 채권자가 보유한 부채는 88.7%, 국외 채권자가 보유한 부채는 11.3%

(단위: 조원, %, %p)

	2013년(A)		2014년(B)		증감(B-A)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원 만기별						
단기	119.7	(13.3)	134.3	(14.0)	14.5	(0.7)
장기	779.0	(86.7)	823.1	(86.0)	44.0	(△0.7)
■ 잔존 만기별						
단기	229.8	(25.6)	242.7	(25.3)	12.8	(△0.3)
장기	668.9	(74.4)	714.6	(74.7)	45.7	(0.3)
■ 표시 통화별						
원화	843.9	(93.9)	901.5	(94.2)	57.6	(0.3)
외화	54.9	(6.1)	55.9	(5.8)	1.0	(△0.3)
■ 이자율 유형별						
고정	849.8	(94.6)	909.6	(95.0)	59.8	(0.4)
변동	49.0	(5.4)	47.7	(5.0)	△1.2	(△0.4)
■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	800.5	(89.1)	849.2	(88.7)	48.6	(△0.4)
국외	98.2	(10.9)	108.2	(11.3)	10.0	(0.4)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부문별 현황 분석

1 일반정부 부채

- (부문별) 중앙정부 부채는 569.3조원, 지방정부 부채는 58.6조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내부거래는 7.3조원

(단위: 조원, %, %p)

	2013년(A)		2014년(B)		증감(B-A)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 일반정부 부채	565.6	39.6	620.6	41.8	54.9	2.2
■ 중앙정부	522.5	36.6	569.3	38.3	46.8	1.7
■ 지방정부	54.6	3.8	58.6	3.9	3.9	0.1
■ 내부거래	△11.5	△0.8	△7.3	△0.5	4.1	0.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항목별) 채무증권 484.8조원, 차입금 69.7조원, 기타 미지급금 66.1조원으로, 채무증권이 전체 부채의 78.1%를 차지

- (채무증권) 중앙정부(468.6조)¹⁾, 지방정부(17.5조)²⁾ 채권에서 중앙-지방간 내부거래(1.3조)³⁾ 제외

- 1) 회계·기금(435.5조)ⁱ⁾+비영리공공기관(36.0조)ⁱⁱ⁾-내부거래(2.8조)ⁱⁱⁱ⁾
 - i) 회계·기금: 국채(501.7조)+공채(33.3조)-연기금 보유 국공채(99.5조)
 - ii) 비영리공공기관: 예보(22.1조), 장학재단(10.8조), 농어촌공사(1.4조) 등
 - iii) 국민연금(2.2조) 및 예금보험공사(0.3조) 보유 비영리공공기관 채권 등
- 2) 자치단체(17.2조)+비영리공공기관(0.3조)
- 3) 국민연금 보유 지방채(1.1조) 등

- (차입금) 중앙정부(55.0조)¹⁾, 지방정부(20.4조)²⁾ 차입금에서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5.8조)³⁾ 제외

- 1) 정부내 융자(6.8조)*를 제외한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41.4조), 민자사업(BTL) 부채(7.2조) 등
 - * 중앙관서→농어촌공사(4.1조), 농수산식품유통공사(0.8조), 환경공단(0.6조) 등
- 2) 자치단체(8.7조)+교육자치단체(11.6조)+비영리공공기관(0.2조)-내부거래(0.1조)
- 3) 중앙정부→자치단체(2.6조), (교육)자치단체→공무원연금(3.0조) 등

- (기타) 중앙정부(45.7조)¹⁾, 지방정부(20.7조)²⁾ 기타 미지급금에서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0.3조) 제외

1) 회계·기금(36.5조)+비영리공공기관(10.4조)-내부거래(1.3조)

2) 자치단체(20.1조)+교육자치단체(0.6조)+비영리공공기관(0.7조)
-내부거래(0.7조)

(단위: 조원, %, %p)

	2013년(A)		2014년(B)		증감(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채무증권	449.3	(79.4)	484.8	(78.1)	35.5	(△1.3)
차입금	56.6	(10.0)	69.7	(11.2)	13.1	(1.2)
기타 미지급금	59.8	(10.6)	66.1	(10.7)	6.3	(0.1)
합 계	565.6	(100.0)	620.6	(100.0)	54.9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성질별) 원화(98.8%), 고정이자율(95.9%), 국내 채권자 보유(89.2%) 부채 비중이 높아, 환율, 이자율,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이 낮은 편

(단위: 조원, %, %p)

	2013년(A)		2014년(B)		증감(B-A)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원 만기별						
단기	66.0	(11.7)	79.4	(12.8)	13.4	(1.1)
장기	499.7	(88.3)	541.2	(87.2)	41.5	(△1.1)
▪ 잔존 만기별						
단기	131.1	(23.2)	153.0	(24.6)	21.9	(1.4)
장기	434.5	(76.8)	467.6	(75.4)	33.1	(△1.4)
▪ 표시 통화별						
원화	557.4	(98.5)	612.9	(98.8)	55.5	(0.3)
외화	8.3	(1.5)	7.7	(1.2)	△0.6	(△0.3)
▪ 이자율 유형별						
고정	542.7	(95.9)	595.1	(95.9)	52.4	(0.0)
변동	22.9	(4.1)	25.4	(4.1)	2.5	(0.0)
▪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	506.0	(89.5)	553.8	(89.2)	47.8	(△0.3)
국외	59.6	(10.5)	66.8	(10.8)	7.1	(0.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비금융공기업 부채

- (부문별) 중앙 공기업 부채는 366.3조원, 지방 공기업 부채는 49.4조원, 공기업 간 내부거래는 7.2조원

(단위: 조원, %, %p)

	2013년(A)		2014년(B)		증감(B-A)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 비금융공기업 부채	406.5	28.5	408.5	27.5	2.0	△1.0
▪ 중앙 공기업	362.0	25.3	366.3	24.7	4.3	△0.6
▪ 지방 공기업	50.9	3.6	49.4	3.3	△1.5	△0.3
▪ 내부거래	△6.4	△0.4	△7.2	△0.5	△0.8	△0.1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항목별) 채무증권 245.9조원, 차입금 63.2조원, 기타 미지급금 99.3조원으로, 채무증권이 전체 부채의 60.2%를 차지

- (채무증권) 중앙 공기업(225.2조)¹⁾, 지방 공기업(20.8조)²⁾ 사채

1) LH(59.2조), 한전 및 발전자회사*(58.2조), 도로공사(24.8조), 가스공사(24.6조), 철도시설공단(18.0조), 철도공사(12.9조), 수자원공사(11.4조) 등
* 발전자회사 :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6개

2) SH(2.8조), 인천도시공사(6.0조), 경기도시공사(4.0조), 서울메트로(1.6조) 등

- (차입금) 중앙 공기업(55.0조)¹⁾, 지방 공기업(8.3조)²⁾ 차입금

1) LH(39.5조), 가스공사(6.0조), 한전 및 발전자회사(4.0조), 석탄공사(1.3조), 철도공사(0.2조) 등

2) SH(3.9조), 인천도시공사(1.2조), 경기도시공사(0.3조) 등

- (기타) 중앙 공기업(86.2조)¹⁾, 지방 공기업(20.3조)²⁾ 기타 미지급금에서 공기업 간 미지급금(7.2조)³⁾ 제외

1) LH(29.7조), 한전 및 발전자회사(31.7조), 가스공사(5.1조) 등

2) SH(10.3조), 경기도시공사(3.7조), 인천도시공사(0.9조) 등

3) 한전-발전자회사 간(4.4조), 가스공사-발전자회사 간(1.1조) 등

(단위: 조원, %, %p)

	2013년(A)		2014년(B)		증감(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채무증권	242.0	(59.5)	245.9	(60.2)	4.0	(0.7)
차입금	65.8	(16.2)	63.2	(15.5)	△2.6	(△0.7)
기타 미지급금	98.8	(24.3)	99.3	(24.3)	0.6	0.0
합 계	406.5	(100.0)	408.5	(100.0)	2.0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성질별)** 일반정부 부채와 비교할 때, 원화 부채 비중(88.2%)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정이자율(94.5%), 국내 채권자 보유(89.9%) 부채 비중은 유사한 수준
- 외화 부채는 주로 가스공사(16.4조), 한전 및 발전자회사(12.1조), 석유공사(9.3조) 등 에너지 공기업이 보유

(단위: 조원, %, %p)

	2013년(A)		2014년(B)		증감(B-A)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원 만기별						
단기	58.7	(14.4)	60.6	(14.8)	1.9	(0.4)
장기	347.8	(85.6)	347.9	(85.2)	0.0	(△0.4)
■ 잔존 만기별						
단기	103.7	(25.5)	95.5	(23.4)	△8.2	(△2.1)
장기	302.8	(74.5)	313.0	(76.6)	10.2	(2.1)
■ 표시 통화별						
원화	359.9	(88.5)	360.3	(88.2)	0.4	△0.3
외화	46.6	(11.5)	48.2	(11.8)	1.6	(0.3)
■ 이자율 유형별						
고정	380.5	(93.6)	386.2	(94.5)	5.7	(0.9)
변동	26.0	(6.4)	22.3	(5.5)	△3.7	(△0.9)
■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	368.0	(90.5)	367.1	(89.9)	△0.9	(△0.6)
국외	38.6	(9.5)	41.4	(10.1)	2.8	(0.6)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전년대비 증감 분석

① 중앙정부 부채

- **(회계·기금)** 전년(479.6조)대비 **46.2조원** 증가한 525.8조원
 - **(채무증권)**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38.4조), 공채 감소(△6.4조)* 등으로 33.8조원 증가
 - * 구조조정기금채권 △2.1조원, 예보채상환기금채권 △4.0조원,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원
 - **(차입금)**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8.1조), BTL 부채(1.2조) 증가 등으로 9.3조원 증가
- **(비영리공공기관)** 전년(53.6조)대비 **0.9조원** 증가한 54.4조원
 - **(채무증권)** 장학재단(2.0조) 사채 증가, 예금보험공사(△1.2조) 사채 감소 등으로 0.9조원 증가
 - **(차입금)** 자산관리공사의 차입금 상환(0.4조) 등으로 0.1조원 감소

(단위: 조원)

	2013년(A)				2014년(B)				증감(B-A)			
	총 부채	채권	차입	기타	총 부채	채권	차입	기타	총 부채	채권	차입	기타
■ 중앙정부	522.5	434.3	45.8	42.4	569.3	468.6	55.0	45.7	46.8	34.4	9.2	3.3
회계·기금	479.6	401.7	44.6	33.4	525.8	435.5	53.9	36.5	46.2	33.8	9.3	3.1
비영리공공기관	53.6	35.2	8.1	10.3	54.4	36.0	8.0	10.4	0.9	0.9	△0.1	0.1
내부거래	△10.7	△2.6	△6.9	△1.3	△10.9	△2.8	△6.8	△1.3	△0.2	△0.3	0.0	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지방정부 부채

- (자치단체) 전년(43.5조)대비 **2.4조원** 증가한 45.9조원
 - * 자치단체별로는 서울(1.2조), 경기(0.6조), 경북(0.4조), 전북(0.1조), 광주(0.09조), 강원(0.09조) 등은 증가하였으며, 충남 (△0.08조), 전남(△0.05조), 대구(△0.03조), 경남(△0.02조), 제주(△0.02조) 등은 감소
 - (채무증권) 지방채(1.5조) 잔액 증가
 - (차입금) 민간 차입금(0.3조)은 증가한 반면, 중앙정부 차입금 (△1.9조)은 감소하여 1.6조원 감소
 - (기타) 장단기미지급금(2.1조), 선수금(0.4조) 등이 증가하여 2.6조원 증가
- (교육자치단체) 전년(10.8조)대비 **1.5조원** 증가한 12.2조원
 - 학교 신·증설 등에 따라 지방교육채 발행(1.5조) 증가
 - (비영리공공기관) 전년(1.1조)대비 **0.1조원** 증가한 1.2조원

(단위: 조원)

	2013년(A)				2014년(B)				증감(B-A)			
	총부채	채권	차입	기타	총부채	채권	차입	기타	총부채	채권	차입	기타
· 지방정부	54.6	16.0	20.6	18.0	58.6	17.5	20.4	20.7	3.9	1.5	△0.1	2.6
자치단체	43.5	15.7	10.3	17.5	45.9	17.2	8.7	20.1	2.4	1.5	△1.6	2.6
교육자치단체	10.8	-	10.1	0.7	12.2	-	11.6	0.6	1.5	-	1.5	0.0
비영리공공기관	1.1	0.3	0.3	0.5	1.2	0.3	0.2	0.7	0.1	0.0	△0.1	0.1
내부거래	△0.8	-	△0.1	△0.7	△0.8	-	△0.1	△0.7	0.0	-	0.0	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비금융공기업 부채

- (중앙) 전년(362.0조)대비 **4.3조원** 증가한 366.3조원
 - (채무증권) 사업비 조달 및 차입금 상환 재원마련을 위한 사채 발행 증가로 8.0조원 증가
 - * 한전 및 발전자회사(7.9조), 가스공사(1.7조) 등
 - (차입금) LH 차입금은 2.6조원 증가한 반면, 주요 기관의 차입금 감소*로 1.9조원 감소
 - * 철도공사(△2.2조), 가스공사(△0.2조), 한전 및 발전자회사 (△1.6조) 등
 - (기타) LH 예수금(△0.4조) 감소 등으로 1.8조원 감소
- (지방) 전년(50.9조)대비 **1.5조원** 감소한 49.4조원
 - (채무증권) SH공사(△3.7조), 인천도시공사(0.9조), 서울메트로 (△0.7조), 경기도시공사(△0.5조) 사채 감소 등으로 4.0조원 감소
 - (차입금) 인천도시공사(△0.3조) 차입금 감소 등으로 0.7조원 감소
 - (기타) 선수금(1.4조) 및 기타비유동부채(1.5조) 증가 등으로 3.2조원 증가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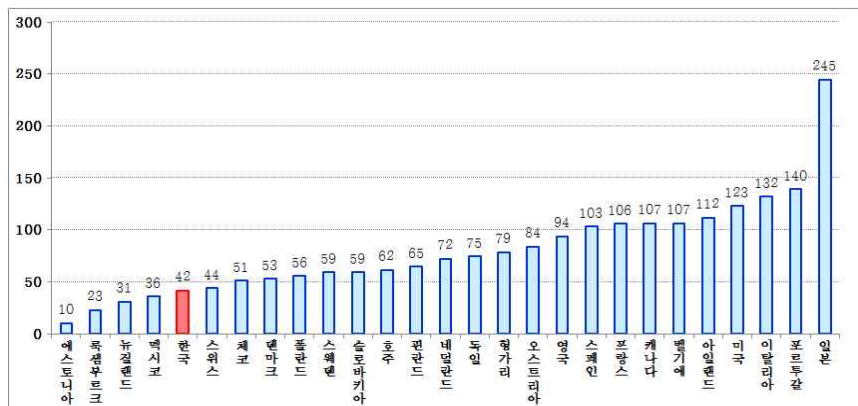
	2013년(A)				2014년(B)				증감(B-A)			
	총부채	채권	차입	기타	총부채	채권	차입	기타	총부채	채권	차입	기타
· 공기업	406.5	242.0	65.8	98.8	408.5	245.9	63.2	99.4	2.0	4.0	△2.6	0.6
중앙	362.0	217.2	56.9	88.0	366.3	225.2	55.0	86.2	4.3	8.0	△1.9	△1.8
지방	50.9	24.8	9.0	17.1	49.4	20.8	8.3	20.3	△1.5	△4.0	△0.7	3.2
내부거래	△6.4	0.0	0.0	△6.3	△7.2	0.0	0.0	△7.2	△0.8	0.0	0.0	△0.8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4 건전성 분석

1 부채 규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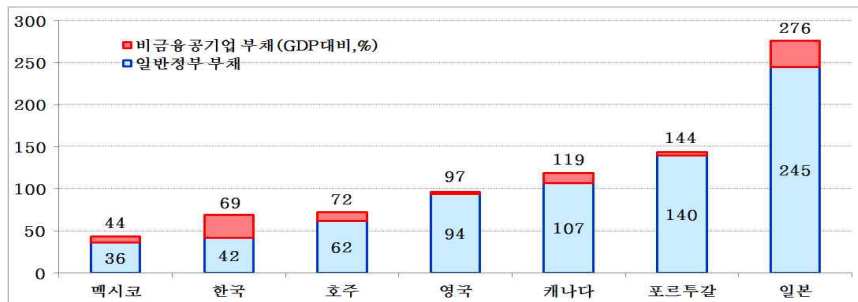
- (일반정부 부채)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 정부 부채는 GDP대비 41.8%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는 정확한 국제비교가 어렵지만*,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

* OECD 국가 중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산출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한국포함)에 불과

-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 및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



*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통계로, 한국의 경우 내부거래 제거시 64.5%

2 추이 분석

-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 대비 1.6%p 증가하였으며, 증가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13년 3.3%p → '14년 1.6%p)
※ 부채 증가속도는 경제 규모,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GDP 대비 비율로 분석
-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2.2%p 증가하였으며, 증가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13년 3.0%p → '14년 2.2%p)
-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규모 감소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규모 감소('13년 2.7%p → '14년 1.7%p)에 주로 기인
-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1.0%p 감소하여 하락세로 전환('13년 0.2%p → '14년 △1.0%p)
- 중앙 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0.6%p 감소하여 하락세로 전환('13년 0.4%p → '14년 △0.6%p)하였고, 지방 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0.3%p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13년 △0.1%p → '14년 △0.3%p)

(단위: 조원, %)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 공공부문 부채	821.1	59.6	898.7	62.9	957.3	64.5
(증감률, 증감)	(9.0%)	(3.1%p)	(9.5%)	(3.3%p)	(6.5%)	(1.6%p)
▪ 일반정부 부채	504.6	36.6	565.6	39.6	620.6	41.8
(증감률, 증감)	(9.9%)	(2.1%p)	(12.1%)	(3.0%p)	(9.7%)	(2.2%p)
- 중앙정부 부채	466.7	33.9	522.5	36.6	569.3	38.3
(증감률, 증감)	(9.6%)	(1.9%p)	(11.9%)	(2.7%p)	(9.0%)	(1.7%p)
- 지방정부 부채	53.7	3.9	54.6	3.8	58.6	3.9
(증감률, 증감)	(4.5%)	(0.0%p)	(1.7%)	(△0.1%p)	(7.2%)	(0.1%p)
▪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2	28.3	406.5	28.5	408.5	27.5
(증감률, 증감)	(7.0%)	(1.0%p)	(4.4%)	(0.2%p)	(0.5%)	(△1.0%p)
- 중앙 공기업 부채	343.5	24.9	362.0	25.3	366.3	24.7
(증감률, 증감)	(6.1%)	(0.6%p)	(5.4%)	(0.4%p)	(1.2%)	(△0.6%p)
- 지방 공기업 부채	51.3	3.7	50.9	3.6	49.4	3.3
(증감률, 증감)	(6.6%)	(0.1%p)	(△0.8%)	(△0.1%p)	(△3.0%)	(△0.3%p)

Ⅲ.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1 부채 총량 관리

① 공공부문 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 중앙(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과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등) 등 공공부문 각 분야별 부채 관리 강화

② 국가채무 수준 관리 강화

- 국가채무(D1)를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며, Pay-go 등 재정준칙 제도화 추진
 -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강화 및 지출 구조 조정 등 강력한 재정개혁의 지속 추진

③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 설정·이행

- '17년까지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80%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영효율화·비핵심자산 매각·사업조정 등 부채감축 방안 추진
 - 공공기관 구분회계 도입·추진(시범사업 완료, '15.6월),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및 심층평가 실시
- 지방공기업 중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의 경우 '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낮추고, 개별 공기업별 부채감축계획 마련
 -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
 - 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된 지방공기업 등은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이 해산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입법 예고 중)

④ 지방재정 개혁의 지속적 추진

-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위기가 닥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재정지표를 사전에 점검·관리해오던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한층 강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교부세 안정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
 - * 보통교부세(20%→23%), 부동산교부세(25%→35%)
 -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자발적 재정건전화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보완

2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① 공공부문 부채 관리체계 강화

- 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추후 공공부문 부채 관리를 강화
 - 공공부문 부채 중기 전망시 부문별 전망치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지방의 경우 금년부터 '14년 지자체 통합부채(지자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우발부채를 작성하여 시범공시
 - 각 지자체는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부채관리관을 지정하여 실행여부를 관리

② 최신 재정통계 국제기준 도입 검토

- 최근 IMF가 발표한 GFSM 2014를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도입하는 방안 검토(현재 GFSM 2001 적용 중)
 - 우리 재정여건과 新기준 도입시 변동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

3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

1 장기재정전망 발표

-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 발표
- 일반재정부문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나, 사회보험부문은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 필요

2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추진

-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수립
- 이를 뒷받침할 재정의 운용 방식과 관련 제도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합하도록 구조적 개혁 추진
-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장기 재정전략 마련('16년 上)

4 재정정보 공개 확대

1 국고보조금 등 재정정보 공개의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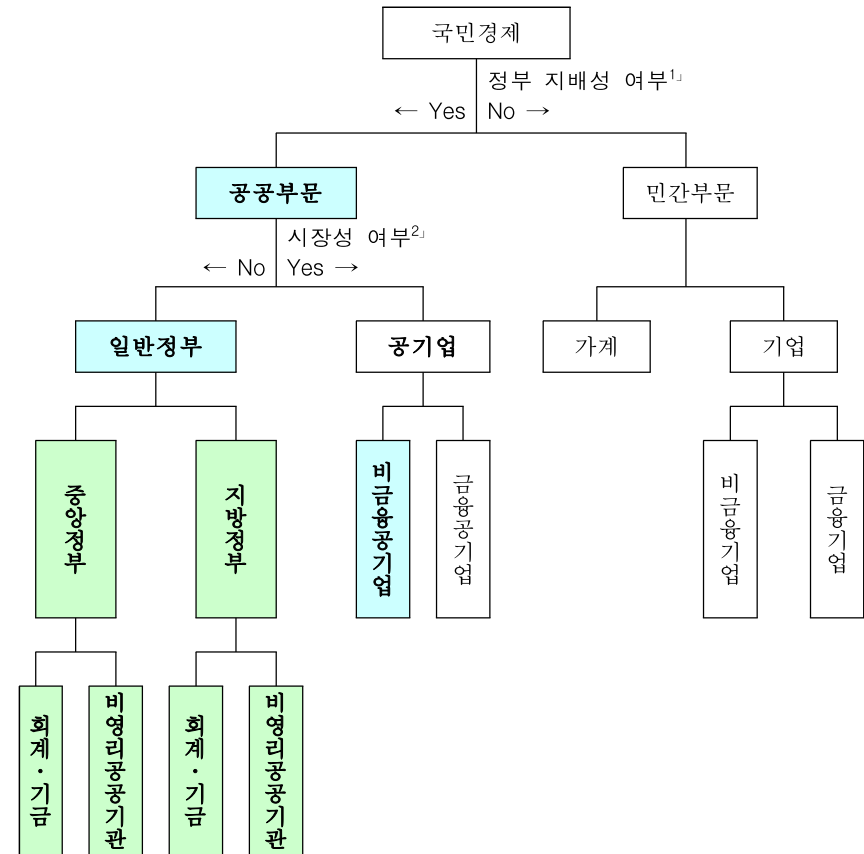
- 국고보조금의 단계별 정보관리공개,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17년 上)
- '열린재정' 사이트('15.7월 개통)를 통하여 복지·문화 등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 비교·통합공개

2 재정정보 통합공개를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

- 현재 분산되어 있는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한 곳에서 공개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 16.5월 예정)' 및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구축

참고 1

공공부문 개념도



1) 정부 지배성 여부

: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등을 보유한 경우, 지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부문으로 분류

2) 시장성 여부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판매액÷판매액)이 80% 이상이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정부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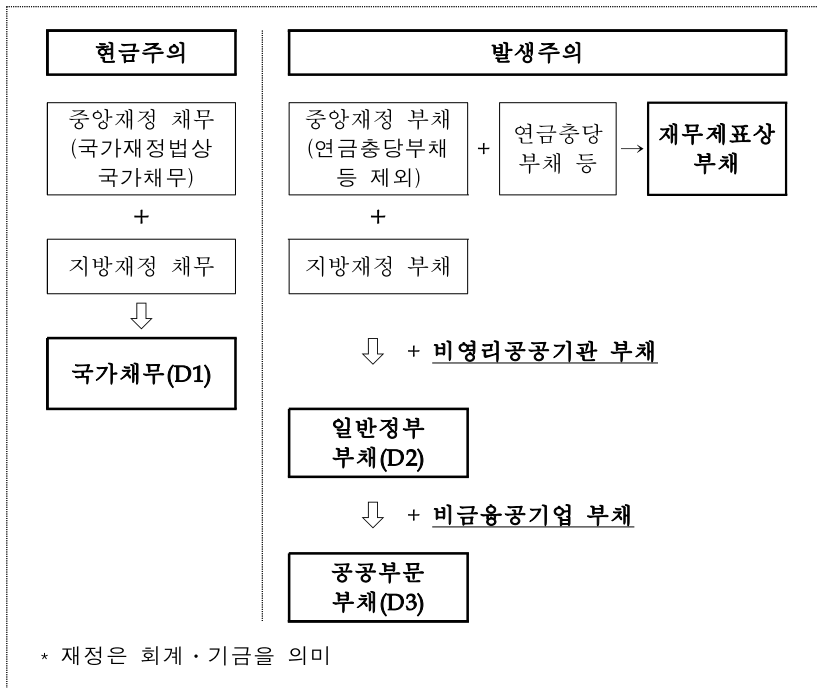
참고 2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

* 재무제표상 부채는 중앙정부 재무결산 결과로 산출되며,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 D3 산출시 활용

유형	규모(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D1)	533.2조원 (35.9%)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D2)	620.6조원 (41.8%)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D3)	957.3조원 (64.5%)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참고 3

D1, D2, D3 비교

(‘14년 결산 기준)

구 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규 모 (GDP 대비)	533.2조원 (35.9%)	620.6조원 (41.8%)	957.3조원 (64.5%)
산출근거	국가재정법(제91조) (‘86 GFS)	국제기준 (‘01 GFS, PSDS)	국제기준 (PSDS)
회계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활용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포 괄 범 위	중앙정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정부 관리기금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정부 관리기금
	지방·교육 자치단체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교육비특별회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교육비특별회계 -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제외	포함
부 채 항 목	국 채	포함	포함
	차입금	포함	포함
	공 채	제외	포함
	충당부채 (공무원·군인 연금 등)	제외	제외 (별도 부기함)
	기타발생주의 부채항목	제외	포함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	포함	제외

참고 4

부채 규모 상세 비교('14년 기준)

(단위: 조원)

분 류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D3)
합 계				533.2조 원	620.6조 원	957.3조 원
공 공 부 문	일반 정부	중앙 정부	회계 · 기금	503.0	525.8	525.8
			비영리공공기관	-	54.4	54.4
			내부거래	-	△ 10.9	△ 10.9
		중앙정부 부채		503.0	569.3	569.3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28.0	45.9	45.9
			지방교육자치단체	4.7	12.2	12.2
			비영리공공기관	-	1.2	1.2
			내부거래	-	△ 0.8	△ 0.8
		지방정부 부채		32.7	58.6	58.6
		중앙-지방간 내부거래		△ 2.5	△ 7.3	△ 7.3
	비금융 공기업	중앙		-	-	366.3
		지방		-	-	49.4
		내부거래		-	-	△ 7.2
		비금융공기업 부채		-	-	408.5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			-	-	△ 71.7

<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 규모 비교 >

	D1	D2, D3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503.0조원	525.8조원
▪ 국채 ¹⁾	498.1	501.7
▪ 차입금 ²⁾	2.6	4.3
▪ 국고채무부담행위 ³⁾	2.4	0.4
▪ 공채	-	33.3
▪ 발생주의 항목	-	85.6
▪ 연기금보유 국공채 ⁴⁾	-	△99.5

1) 액면가액(D1)과 할인·할증 발행을 반영한 장부가액(D2, D3) 차이

2) 공공기관 관리기금 제외(D1) 및 포함(D2, D3)

3) 계약시 인식(D1), 지급의무 발생시 인식(D2, D3)

4) 국민연금 보유 국채(88.5조)·공채(7.7조) 등 내부거래로 제거

참고 5

OECD 국가의 부채 현황('14년 기준)

(단위: 십억\$, %)

국가	공공부문(A+B)		일반정부(A)		비금융공기업(B)	
	금 액	GDP대비	금 액	GDP대비	금 액	GDP대비
호주	943	72	809	62	134	10
오스트리아	-	-	337	84	-	-
벨기에	-	-	519	107	-	-
캐나다	2,027	119	1,815	107	212	12
체코	-	-	96	51	-	-
덴마크	-	-	168	53	-	-
에스토니아	-	-	3	10	-	-
핀란드	-	-	162	65	-	-
프랑스	-	-	2,747	106	-	-
독일	-	-	2,652	75	-	-
헝가리	-	-	97	79	-	-
아일랜드	-	-	257	112	-	-
이탈리아	-	-	2,593	132	-	-
일본	11,144	276	9,898	245	1,246	31
룩셈부르크	-	-	14	23	-	-
멕시코	508	44	421	36	86	7
네덜란드	-	-	583	72	-	-
뉴질랜드	-	-	131	31	-	-
폴란드	-	-	274	56	-	-
포르투갈	302	144	294	140	8	4
슬로바키아	-	-	54	59	-	-
스페인	-	-	1,326	103	-	-
스웨덴	-	-	299	59	-	-
스위스	-	-	288	44	-	-
영국	2,739	97	2,663	94	75	3
미국	-	-	21,379	123	-	-

* 출처: OECD, World Bank

참고 6

공공부문 포괄범위

구 분			2013	신규	해제	2014
중앙정부	회계·기금	일반회계	61개	정부조직개편		54개
		특별회계	18개	-	-	18개
		기금	65개	-	1개	64개
	비영리 공공기관		172개	16개 * (재)APEC기후센터 외 15개	2개 * 한국공예예술센터, 산업기술연구회	186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244개	-	1개 * 청원군	243개
		기타 특별회계	1,919개	47개	67개	1,899개
		직영 공기업 특별회계	253개	2개 * 합천군 상수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1개 * 청원군 상수도	254개
		기금	2,391개	61개	74개	2,378개
	지방교육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17개	-	-	17개
	비영리 공공기관		90개	3개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2개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김해시시설관리공단	91개
공기업	중앙 비금융공기업		124개	4개 * 국제원산지정보원, (주)해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4개 * 시장경영진흥원, 인천종합에너지,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124개
	지방 비금융공기업		51개	2개 * 장수한우지방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개 * 완도개발공사(청산 완료),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청산진행중)	51개

참고 6-1

중앙 공공부문 포괄범위('14년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회계 (54개)	56개 중앙관서 중 일반회계가 없는 조달청, 특허청 제외(54개) * 폐지부처(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14.11.19.) 포함
특별회계 (18개)	1.농어촌구조개선, 2.교통시설, 3.등기, 4.교도작업, 5.에너지및자원사업, 6.환경개선, 7.우체국보훈, 8.주한미군기지이전, 9.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10.국방·군사시설이전, 11.혁신도시건설, 12.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3.광역·지역발전, 14.양곡관리, 15.책임운영기관, 16.조달, 17.우편사업, 18.우체국예금
기금 (64개)	1.고용보험, 2.공공자금관리, 3.공무원연금, 4.공적자금상환, 5.과학기술진흥, 6.관광진흥개발, 7.국민건강증진, 8.국민연금, 9.국민주택, 10.국민체육진흥, 11.국제교류, 12.군인복지, 13.군인연금, 14.근로자복지진흥, 15.금강수계관리, 16.낙동강수계관리, 17.남북협력, 18.농산물가격안정, 19.농어업재해재보험, 20.농지관리, 21.대외경제협력, 22.문화예술진흥, 23.문화재보호, 24.방사성폐기물관리, 25.방송발전, 26.범죄피해자보호, 27.보훈, 28.복권, 29.사립학교교직원연금, 30.사학진흥, 31.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32.석면피해구제, 33.수산업전, 34.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35.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 36.양곡증권정리, 37.연륜진흥, 38.여성발전, 39.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40.영화발전, 41.원자력연구개발, 42.응급의료, 43.임금채권보장, 44.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45.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46.전력산업기반, 47.정보통신진흥, 48.중소기업창업및진흥, 49.지역신문발전, 50.청소년육성, 51.축산발전, 52.특정물질사용합리화, 53.한강수계관리, 54.·외국환평형, 55.기술신용보증, 56.구조조정, 57.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58.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59.산업기반신용보증, 60.무역보험, 61.신용보증, 62.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63.주택금융신용보증 64.국유재산관리기금
비영리 공공기관 (186개)	1.공무원연금공단, 2.예금보험공사, 3.기술신용보증기금, 4.국민연금공단, 5.한국연륜진흥재단, 6.한국문화예술위원회, 7.한국무역보험공사, 8.한국자산관리공사, 9.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신용보증기금, 11.영화진흥위원회, 12.중소기업진흥공단, 13.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국립공원관리공단, 15.국민건강보험공단, 16.국제방송교류재단, 17.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도로교통공단, 20.농업기술실용화재단, 21.한국과학창의재단, 22.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3.한국보건산업진흥원, 24.한국산업단지공단, 25.한국산업인력공단, 26.한국소비자원, 27.한국장애인고용공단, 28.한국농어촌공사, 29.한국광해관리공단, 30.한국세라믹기술원, 31.한국교육학술정보원, 32.독립기념관, 33.여수광양항만공사, 3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5.한국인터넷진흥원, 36.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7.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8.한국고용정보원, 39.한국우체국물류지원단, 40.한국노인인력개발원, 41.한국연구재단, 42.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3.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한국산업기술진흥원, 45.정보통신산업진흥원, 46.한국콘텐츠진흥원, 47.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8.한국환경공단, 49.한국장학재단, 50.한국디자인진흥원, 5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2.한국정보화진흥원, 5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54.농림수산물품질기술기획평가원, 55.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56.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57.경제인문사회연구회, 58.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9.국토연구원, 60.국가과학기술연구회, 61.대외경제정책연구원, 62.대한법률구조공단, 63.한국고전번역원, 64.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 65.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6.국방과학연구소, 67.국민생활체육회, 68.출판문화산업진흥원, 69.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70.(재)체육인재육성재단, 7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2.한국교육개발원, 73.한국교통연구원, 74.한국국방연구원, 75.한국국제교류재단, 76.한국기계연구원, 77.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8.한국노동연구원, 79.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80.한국문학번역원, 81.한국문화관광연구원, 82.한국법제연구원, 83.한국보건사회연구원, 84.한국사학진흥재단, 85.한국생명공학연구원, 86.한국식품연구원, 87.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8.한국여성정책연구원, 89.한국영상자료원, 90.한국원자력문화재단, 91.한국항공우주연구원, 9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94.산업연구원, 95.영상물등급위원회, 96.재외동포재단, 97.신용보증재단중앙회, 98.(재)명동·정동극장, 99.통일연구원, 100.한국국제협력단, 101.한국개발연구원, 102.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03.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4.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5.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6.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7.국방기술품질원,

	108.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9.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0.한국천문연구원, 1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2.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3.한국학중앙연구원, 114.한국한의학연구원, 115.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6.한국행정연구원, 117.한국화학연구원, 118.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19.대한장애인체육회, 120.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121.한국특허정보원, 122.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23.동북아역사재단, 124.녹색사업단, 125.향로표지기술협회, 126.정부법무공단, 127.한국저작권위원회, 128.게임물등급위원회, 129.전략물자관리원, 130.태권도진흥재단, 131.학교법인한국폴리텍, 132.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3.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4.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5.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6.소상공인진흥재단, 137.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38.대구경북과학기술원, 139.노사발전재단, 140.한국장애인개발원, 141.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42.재단법인국악방송, 143.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44.(재)예술경영지원센터, 145.한국로봇산업진흥원, 146.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47.창업진흥원, 148.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49.한국기상산업진흥원, 150.한국임업진흥원, 151.기초과학연구원, 152.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53.농업정책자금관리단, 154.세종학당재단, 155.한국건강증진재단, 156.한국보건의료연구원, 157.한국보육진흥원, 158.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59.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0.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1.(재)한국문화정보센터, 162.서울대학교, 163.울산과학기술원, 164.국립생태원, 165.(주)위트웨이플러스, 166.항공안전기술센터, 167.한국건강가정진흥원, 168.한국공정거래조정원, 169.아시아문화개발원, 170.한국여성인권진흥원, 171.(재)APEC기후센터, 172.(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73.(재)한식재단, 174.(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175.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76.국립광주과학관, 177.국립대구과학관, 178.IOM이민정책연구원, 179.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80.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81.(재)한국스마트그라프사업단, 182.한국식품관리인증원, 183.(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84.한국방사선안전재단, 185.(재)중소기업연구원, 186.한국해양조사협회
비금융 공기업 (124개)	1.부산항만공사, 2.인천국제공항공사, 3.인천항만공사, 4.한국지역난방공사, 5.한국공항공사, 6.한국석유공사, 7.한국전력공사, 8.한국가스공사, 9.한국중부발전, 10.한국수력원자력, 11.한국서부발전, 12.한국동서발전, 13.한국남부발전, 14.한국남동발전, 15.한국광물자원공사, 16.한국토지주택공사, 17.대한석탄공사, 18.한국철도공사, 19.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한국감정원, 21.한국관광공사, 22.한국도로공사, 23.한국마사회, 2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5.한국수자원공사, 26.한국조폐공사, 27.군포복지공단, 28.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9.한국원자력환경공단, 30.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2.한국석유관리원, 33.한국시설안전공단, 34.한국전기안전공사, 35.한국전력거래소, 36.교통안전공단, 37.에너지관리공단, 38.축산물품질평가원, 39.한국산업기술시험원, 40.선박안전기술공단, 41.한국가스안전공사, 42.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4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4.한국해양수산연수원, 45.한국우편사업진흥원, 46.한지직공사, 47.한국소방산업기술원, 48.한국철도시설공단, 49.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50.강원대학교병원, 51.강릉랜드, 52.경북대학교병원, 53.경상대학교병원, 54.광주과학기술원, 55.대한적십자사, 56.대한체육회, 57.한국교육과정평가원, 58.중소기업유통센터, 59.한국회귀의약품센터, 60.국립중앙의료원, 61.한국건설관리공사, 62.한국기술교육대학교, 63.한국문화진흥, 64.한진원자력연료, 65.88관광개발, 66.울산항만공사, 67.한국지식재산연구원, 68.부산대학교병원, 69.서울대학교치과병원, 70.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1.에너지경제연구원, 72.예술의전당, 73.한국원자력의학원, 74.전남대학교병원, 75.전쟁기념사업회, 76.정보통신정책연구원, 77.주택관리공단, 78.한국가스기술공사, 79.충북대학교병원, 80.코레일로지스, 81.국립암센터, 82.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83.서울대학교병원, 84.충남대학교병원, 85.한국문화재보호재단, 86.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87.한국생산기술연구원, 88.한국원자력연구원, 89.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90.한국전력기술, 91.한국지질자원연구원, 92.한국체육산업개발, 93.한국해양수산개발원, 94.한전KPS, 95.한전KDN, 96.코레일네트웍스, 97.기초전략연구원, 98.국립박물관문화재단, 99.한국발명진흥회, 100.(재)우체국시설관리단, 101.한국사회복지협의회, 102.코레일테크, 103.인천항만공사, 104.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5.전북대학교병원, 106.제주대학교병원, 107.한국과학기술원, 108.한국전기연구원, 109.코레일유통, 110.한국어촌어항협회, 111.부산항보안공사, 112.코레일관광개발, 113.그랜드코리아레저, 114.해양환경관리공단, 115.국립식물검역인증원, 116.부산대학교치과병원, 117.한국잡월드, 118.한국방송공사, 119.한국교육방송공사, 120.인천대학교, 121.국제환신자정보원, 122.(주)해울, 123.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24.한국상하수도협회

* 밑줄 친 기관(비영리공공기관 16개, 비금융공기업 4개)은 '14년 신규 기관

참고 6-2

지방 공공부문 포괄범위('14년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회계 (243개)	광역시·도 17개, 기초 시·군·구 226개(시 75개, 군 82개, 구 69개)
기타 특별회계 (1,899개)	차지단체별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
직영공기업 특별회계 (254개)	상수도 116개, 하수도 87개, 공영개발 33개, 지역개발기금 18개
기금 (2,378개)	노인, 청소년,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특정목적을 위해 각 차지단체가 설립
교육비특별회계(17개)	광역시·도 17개 교육비 특별회계
비영리 공공기관 (91개)	(공사) 1.대구, 2.광주, 3.대전 도시철도공사, 4.인천교통공사, 5.양평지방공사, 6.청도공영사업공사 7.의왕도시공사 8.구리도시공사 9.경상북도관광공사 (공단) 10.달성군시설관리공단 11.충주군시설관리공단 12.충구시설관리공단 13.웅산구시설관리공단 14.성동구도시관리공단 15.광진구시설관리공단 16.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17.충랑구시설관리공단 18.성북구도시관리공단 19.강북구도시관리공단 20.도봉구시설관리공단 21.노원구시설관리공단 22.은평구시설관리공단 23.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 24.마포구시설관리공단 25.양천구시설관리공단 26.강서구시설관리공단 27.구로구시설관리공단 28.금천구시설관리공단 29.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30.동작구시설관리공단 31.관악구시설관리공단 32.강남구도시관리공단 33.송파구시설관리공단 34.강동구도시관리공단 35.부산시설공단 36.부산환경공단 37.부산지방공단스포원 38.기장군도시관리공단 39.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40.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41.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42.인천환경공단 43.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44.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45.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46.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47.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48.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49.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50.광주광역시환경공단 51.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52.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53.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54.울주군시설관리공단 55.수원시시설관리공단 56.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57.부천시시설관리공단 58.안양시시설관리공단 59.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60.시흥시시설관리공단 61.파주시시설관리공단 62.군포시시설관리공단 63.안주시시설관리공단 64.안성시시설관리공단 65.포천시시설관리공단 66.오산시시설관리공단 67.과천시시설관리공단 68.여주시시설관리공단 69.가평군시설관리공단 70.연천군시설관리공단 71.동해시시설관리공단 72.속초시시설관리공단 73.영월군시설관리공단 74.정선군시설관리공단 75.청주시시설관리공단 76.단양관광관리공단 77.보령시시설관리공단 78.전주시시설관리공단 79.포항시시설관리공단 80.안동시시설관리공단 81.구미시설공단 82.문경관광진흥공단 83.창원시시설관리공단 84.창원경륜공단 85.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86.양산시시설관리공단 87.천안시시설관리공단 88.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89.이천시시설관리공단 90.부여군시설관리공단 91.아산시시설관리공단
비금융 공기업 (51개)	1.서울메트로 2.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부산교통공사 4.SH공사 5.부산도시공사 6.대구도시공사 7.인천도시공사 8.광주광역시도시공사 9.대전도시공사 10.울산도시공사 11.경기도공사 12.강원도개발공사 13.충북개발공사 14.충청남도개발공사 15.전북개발공사 16.전남개발공사 17.경상북도개발공사 18.경상남도개발공사 19.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서울농수산식품공사 21.김대중컨벤션센터 22.대전마케팅공사 23.경기관광공사 24.경기평택항만공사 25.고양도시관리공사 26.용인도시공사 27.안산시도시공사 28.남양주도시공사 29.평택도시공사 30.화성도시공사 31.광주지방공사 32.김포도시공사 33.구리농수산물공사 34.하남시도시개발공사 35.춘천도시공사 36.강릉관광개발공사 37.태백관광개발공사 38.당진항만관광공사 39.여수시도시공사 40.정송사과유통공사 41.영양고추유통공사 42.동영관광개발공사 43.함안지방당사 44.창녕군개발공사 45.제주관광공사 46.부산관광공사 47.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48.제주에너지공사 49.성남도시개발공사 50.장수한우지방공사 51.김해시도시개발공사